

[성명서]

2015년 일한 역사 문제에 대하여 일본 지식인의 입장을 밝힌다 2015年6月8日

2010년 에 <한국병합> 100년 일한 지식인 공동 성명을 발표한 우리들은, 오늘날 일한관계를 위기에 빠지게 하고 있는 역사문제에 대하여 새로 성명을 내려고 합니다. 준비하고 있는 중 미국의 187명의 일본연구자들이 「일본의 역사가들을 지지하는 성명 Open letter in support of historians in Japan」을 발표했습니다. 그 것에 응하는 마음도 기울여 있습니다. 덧붙여 말하면 「일본의 지식인」이란 intellectuals in Japan 이라는 뜻입니다.

이번 성명은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과 한국의 운동단체가 2014년 6월에 제기한 해결안을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서명자는

鹿野政直 (와세다대학 명예교수) ,

三谷太一朗 (도쿄대학 명예교수) ,

이성시 (와세다대학교수) ,

조경달 (치바대학교수) ,

木畑洋一 (세이조대학교수) ,

藤間生大 (일본사가, 102세) ,

永井和 (교토대학교수) ,

新崎盛暉 (오키나와대학 명예교수) ,

강상준 (도쿄대학 명예교수) ,

山下英愛 (분쿄대학교수) ,

石田雄 (도쿄대학 명예교수) ,

김석범 (작가) ,

小林久公 (강제동원 진상구명 네트워크 사무국 차장) ,

花房俊雄 (관부(関釜)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전대표) ,

渡辺美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전국행동 공동대표) ,

東海林勤 (고오라이(高麗)박물관 이사)

등 역사가, 학자·연구자, 문필가, 편집자, 변호사, 사회활동가, 종교자 등 270명에 이르렀습니다.

발기인은 다음과 같은 17명입니다.

石坂浩一 (릿교대학준교수·한국사회론),

上野千鶴子 (도쿄대학명예교수·여성학),

内海愛子 (오사카케이호대학 아시아 태평양 연구센터 특임교수),

太田修 (도시샤대학교수·조선사),

小田川興 (재한 피폭자문제 시민위원회 대표),

糟谷憲一 (히토쓰바시대학명예교수·조선사),

高崎宗司 (쓰다주쿠대학명예교수·일본사),

田中宏 (히토쓰바시대학명예교수·전후보상문제),

外村大 (도쿄대학준교수·조선사),

中塚明 (나라여자대학명예교수·일조관계사),

林博史 (간토가쿠인대학교수·일본현대사),

水野直樹 (교토대학교수·조선사),

宮田節子 (가쿠슈인대학 동양문화연구소 객원연구원·전 조선사연구회회장),

山田昭次 (릿교대학명예교수·일본사),

矢野秀喜 (일한 다시 맺자 캠페인(つながり直しキャンペーン) 2015사무국),

吉沢文寿 (니이가타국제정보대학교수·조선사),

和田春樹 (도쿄대학명예교수·역사학)

〒178-0061 東京都練馬区大泉学園町7-6-5 和田春樹

Tel : +81-(0)3-3922-1219

2015년 일한 역사 문제에 대하여 일본 지식인의 입장을 밝힌다

2010년 5월 10일, ‘한국병합’ 100년에 즈음하여 우리는 병합 과정과 ‘병합조약’에 대해 한국의 지식인과 함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시작할 무렵 100명이던 일본의 서명자 수가 7월에는 500명을 넘게 되었다. 이 성명은 다음과 같다.

‘지금껏 두 나라의 역사학자들은 일본에 의한 한국병합이 일본 정부의 장기적인 침략 정책, 일본군의 거듭된 점령 행위, 명성황후 살해, 국왕과 정부 요인에 대한 협박, 그리고 이에 대한 한국인들의 항거를 압살함으로써 실현된 결과라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일본 국가의 ‘한국병합’ 선언은 1910년 8월 22일의 병합조약에 근거하여 설명되고 있다.’ 힘으로 민족의 의지를 짓밟은 병합의 역사적 진실은, 평등한 양자의 자발적 합의로 한국 황제가 일본에 국권 양여를 신청하고 일본 천황이 그것을 받아들여 한국병합에 동의했다고 하는 신화(神話)로 덮여 씌워졌다. 조약의 전문(前文)도 거짓이고 본문도 거짓이다.’

‘한국병합에 이르는 과정이 불의부당(不義不當)하듯이 한국 병합조약도 불의 부당하다.’

이 성명에 응답하여 일본 정부는 2010년 8월 10일, ‘한국병합’ 100년에 즈음한 간나오토(菅直人) 총리의 담화를 발표했다. ‘정확히 100년 전 8월 일한 병합조약이 조인되고 그 후 36년에 걸친 식민지 지배가 시작되었습니다. 3·1독립운동 등의 격렬한 저항으로도 알 수 있듯이 정치적·군사적 배경 하에서, 당시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강행된 식민지 지배로 나라와 문화를 빼앗기고 민족적 자부심을 심각하게 훼손당했습니다.’

‘이러한 식민지 지배로 비롯된 막대한 손해와 고통에 대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통절한 반성의 뜻과 진심 어린 사죄를 표명합니다.’

「간 총리 담화」는 애매한 표현이긴 하나 결국 병합의 강제성을 인정한 것으로,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총리 담화」의 인식을 계승하고 그것을 더욱 발전시킨 것이었다.

2010년 이후 한국에서는 2011년 8월 헌법재판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관하여 일한 양 정부간에 1965년의 ‘청구권 협정’에 대한 해석 상의 분쟁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그 협정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아니하고 있는 부작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냈다. 이 결정에 의하여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게 위안부 문제 해결을 강력하게 요구하게 되었다. 그리고 2012년 5월에는 한국 대법원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기인하는 ‘강제 동원’ 피해는 ‘청구권 협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게 되었다. 이 판결이야말로 강제 동원된 노동자 문제 해결에 대해 새로운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일한 관계는 2012년 8월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獨島) = 다케시마(竹島) 방문과 이에 대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정권의 반발, ‘고노(河野)담화’와 ‘무라야마 담화’의 재검토를 표방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수상의 제 2차 정권 등장 등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 담화 재검토라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한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에서도 강력한 비판이 일었기 때문에 아베 수상은 담화를 계승한다고 공언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회담의 전제로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한 데 대해서 아베 수상이 응하지 않으면서 일한 대립은 결정적인 것이 되었다. 이 대립 속에서 일부 보수언론이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무책임한 역사 인식을 확산시켰고 ‘고노 담화’ 부정론을 선전하고 있다. 일본 국민의 의식도 동요를 보이는 상태가 되었다.

올해는 <일한조약 체결> 50주년, 일본의 패전과 조선의 식민지 지배로부터의 해방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아베 수상은 새로운 총리 담화의 발표를 예고했다. ‘아베 담화’는,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 그리고 ‘간 담화’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발표한 역사 문제 담화를 계승하는 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침략과 식

민지 지배가 중국과 한국 등 아시아의 여러 이웃 나라 사람들에게 손해와 고통을 주었음을 재삼 확인하고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다시금 표명해야 한다.

일한 간에는 해결해야 할 역사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위안부 문제이다. 과거 전쟁 시기 여성들을 일본군

위안소에 모아 일본군 장병(將兵)들에게 성적 봉사를 강제함으로써 그녀들에게 크나 큰 고통을 준 것은 이미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1991년부터 피해 여성들이 나서서 일본의 책임을 고발하고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면서, 일본 정부는 진상 구명의 노력을 시작했다. 1993년에는 고노 관방장관의 담화를 발표하여 사죄한 바 있다. 그로부터 1995년 일본 정부는 <아시아 여성 기금>을 만들어 사죄와 ‘쓰구나이(償い, atonement)’ 사업을 실시했다. 이 기금은 한국, 대만, 필리핀, 네덜란드 등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했다.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피해자 개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실시하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국민기금에서 ‘쓰구나이(償い)금’을 지불했지만, 정부가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강한 반발이 일어나,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 삼분의 이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기금의 사업을 받지 않았다. 이 점에 한해서는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 사업은 미완이며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못한 것이다. 일본 정부의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

‘고노 담화’ 이후에도, 일본 정부에 의해, 그리고 일한의 연구자와 시민들에 의해 위안부 제도에 관한 새 자료가 발굴되어 공개되었다. 그 결과 위안소의 설치·운영은 민간업자가 아니라 바로 일본군이 주체가 되어 실행한 것임이 밝혀졌다. 일본 국가와 일본군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그런 와중에, 오랫동안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해 온 한국과 일본의 운동단체가 역사가와 법률가의 협조를 얻어 2014년 6월,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고 일본 정부도 실행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해결안을 제시했다. 사실의 인정을 전제로 한 사죄, 그리고 사죄를 상징하는 것으로서의 ‘배상’이 그 핵심이다. 지금이야말로 한일 양국의 정부가 협력하여, 생존자가 불과 50여 명밖에 남지 않은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

의 실마리를 제시해야만 한다. 양국 정부가 시작해야 두 나라의 시민들도 해결안을 완성하는 작업에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과 한국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이다. 식민지 지배 36년의 역사를 어떻게 극복하고 청산할 것인가에 대해 두 나라의 시민들은 이미 오랜 세월 동안 노력해왔다. 한국인이 주도하고 여기에 일본인이 응답하면서